

제1주제

# 건설안전정책방향

건설안전추진반



## <목 차>

I. 산재예방활동의 필요성 .....	7
II. 산재예방정책의 추진성과 .....	8
III. 건설업계의 경영악화와 안전관리 .....	10
IV. 건설안전 주요정책 기조 .....	11
V. IMF체제하의 건설안전 정책방향 .....	12
VI. 맺 음 말 .....	14



## I. 산재예방활동의 필요성

- 산업재해는 개인의 측면에서 신체적 손상과 정신적 고통은 물론, 일시 또는 영구적 노동력상실로 본인과 가족의 생계유지를 어렵게 하고, 기업의 측면에서는 막대한 투자로 양성된 기능인력의 손실을 가져오고 기계·설비 및 제품의 파손등에 따른 생산차질로 기업경영을 악화시키며 특히, 대형사고가 발생한 기업의 경우 기업이미지에 막대한 손상을 입게 됨
  - 또한 안전사고 및 직업병으로 인한 신체장해자 또는 사망자들의 발생은 이들을 부양하고 유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부담이 되며 나아가 사회적인 불안요인으로 작용함
- 따라서 선진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 시점에 있어서 산재예방활동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음
- 이미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안전을 통한 재해예방활동이 생산성·품질향상, 기업손실절감 등 경영요소 전반에 대해 매우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일반화하고 있으며
  - 이 시스템은 생산계획, 품질관리등 기업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안전·보건을 경영차원에서 도입·관리하는 것으로서 경제적인 논리하에서 사회적 규제인 안전·보건에 관한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우리의 상황논리를 생각하면 그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 있음
- 우리도 이제는 안전보건관리를 기업경영에 있어서 비용으로만 생각하는 낡은 관념에서 벗어나, 경영의 한 요소로서 안전·보건을 생각하는 적극적인 자세로의 전환이 요구됨

## II. 산재예방정책의 추진성과

- 60년대의 산업화의 시작과 70년대의 눈부신 경제발전으로 세계사에 유례없는 『압축고속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경제적 효율성과 생산성을 강조한 나머지 근로자의 안전과 보전은 상대적으로 경시되어 왔었다고 볼 수 있으며
  - 80년대에 들어와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과 노동부내에 산업안전국이 설치되면서 우리나라의 안전·보건관리가 정부의 주도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90년대에 일어난 크고작은 사고와 직업병이 계기가 되어 사회적인 관심의 폭증이 있었고 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활동도 활성화되고 정착단계에 이르렀음
- 이러한 산업안전보건정책의 발전의 결과는 재해율의 꾸준한 감소로 나타나 지난 10년간의 전산업의 재해율 변화를 보면 '87년 2.66%에서 '97년 0.8%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동 기간 동안 건설업 재해율도 2.27%에서 0.72%로 3배이상의 감소를 보였음

※ 산업재해현황('87. ~ '97)

년도	구 분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사망자수
'97	건설업	2,544,436	18,291	0.72	798
	전산업	8,236,641	66,770	0.81	2,742
'96	건설업	2,453,923	19,785	0.81	789
	전산업	8,156,894	71,548	0.88	2,670
'95	건설업	2,240,990	22,542	1.01	715
	전산업	7,893,727	78,034	0.99	2,662
'94	건설업	1,978,629	24,271	1.23	743
	전산업	7,273,132	85,948	1.18	2,678

년도	구 분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사망자수
'93	건설업	1,816,892	26,129	1.44	636
	전산업	6,942,527	90,288	1.30	2,210
'92	건설업	1,911,378	36,255	1.90	848
	전산업	7,058,704	107,435	1.52	2,429
'91	건설업	2,627,010	42,302	1.61	801
	전산업	7,922,704	128,169	1.62	2,299
'90	건설업	2,412,340	37,102	1.54	673
	전산업	7,542,752	132,893	1.76	2,236
'89	건설업	2,175,312	30,845	1.42	461
	전산업	6,687,821	134,127	2.01	1,724
'88	건설업	1,505,764	31,076	2.06	484
	전산업	5,743,970	142,329	2.48	1,925
'87	건설업	1,479,697	33,646	2.27	463
	전산업	5,356,546	142,596	2.66	1,761

○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상태로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요구되는 실정으로

- '97년도 재해현황을 살펴보면 66,770명이 재해를 당했으며 이 중에서 2,742명이 사망하므로써 이로 인한 직·간접적인 경제손실액이 7조7천억원에 달하며 이를 환산해보면 하루에 183명이 재해를 당하고 8명이 사망하였음
- 건설업의 재해도 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전체산업재해의 27.4%를 차지하고 사망자수는 29.1%에 이르고 있어 건설재해의 심각함을 말해줌

### Ⅲ. 건설업계의 경영악화와 안전관리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건설수주액이 금년 3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20%이상의 감소를 보이다가 5월에 들어서서는 전년 동월대비 무려 58.6%의 격감을 하였고 기존의 현장들도 공사금액 미지급등으로 중단되는 경우가 많아 최근의 건설경기는 최악의 사태를 맞고 있으며
  - 이러한 상황하에서 각 업체에서는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이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정리대상 최우선순위가 될 우려가 있으며, 아직은 일부의 현상이지만 본사 안전관리부서의 통폐합, 예산의 감축등 우려한 바가 현실로 나타나는 경우도 파악이 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안전관리를 단순히 비용으로만 생각하는 극히 근시안적인 견해에서 초래한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오류이며, 인명사고는 다시 복구가 안되는, 그래서 한 개인·가족을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이끈다는 인륜적인 이유를 거론치 않아도 안전사고는 곧바로 기업의 엄청난 손실로 이어져 경영난에 허덕이는 건설업계를 더욱 궁지에 빠뜨릴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임
- 그러나, 아무리 안전관리가 포기할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라 하더라도 무한정의 비용을 투입할 수는 없기에 다른 경영요소들 처럼 어떤 시점에서의 경제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관리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음



## IV. 건설안전 주요정책 기조

### ■ 재해감소를 통한 경제손실의 최소화

- 앞에서 언급했듯이 산업재해는 곧 엄청난 경제손실을 의미하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기업들의 경영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게 됨
  - 따라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통한 재해감소는 지금과 같이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기업을 살리는 방책이라 할 수 있으며 안전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임
- 이를 위해서 추락등 다발재해를 억제하고 특히 중대재해를 방지하는 정책들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안전관리능력이 부족한 영세현장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을 확대·강화

### ■ 기업자율의 재해예방활동의 촉진

-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보고 및 관여등을 최대한으로 억제하는 한편, 안전관리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사업장의 점검도 최소화하여
  - 기업 자율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관리자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등의 안전관리 활동을 활성화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자체점검을 강화토록 하는 등 내실있는 재해예방활동을 추진

### ■ 재해예방분위기의 지속적 확산

- 규제완화분위기 및 경제난 속에 묻혀 자칫 이완되기 쉬운 안전의식을 지속적으로 고양시키기 위해 사업주에게는 안전시설 설치등의 확행을 근로자에게는 개인보호구 착용등 안전수칙 준수의 풍토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안전캠페인을 전개하고

- 실업난속에서 값싼 유희인력의 건설현장으로의 유입등으로 일용 및 미숙련근로자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이 그 어느때보다 요구되므로 채용시 교육, 작업전 위험예지 훈련등 자체교육과 이동안전교육센터등을 통한 영세규모현장에 대한 지원교육을 강화
- 또한 범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엄정한 법집행을 하므로써, 점검의 축소등으로 인하여 일부에서 발생될 수 있는 안전관리의식 해이를 방지

## V. IMF체제하의 건설안전 정책방향

### ■ 안전관리의 질적인 향상유도

- 그간의 꾸준한 안전정책의 시행으로 양적인 안전관리는 어느정도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며 이의 예로 방망의 설치, 안전난간의 설치, 근로자들의 안전모착용등 각종 점검시 지적될 수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지켜지고 있으나
  -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방망의 강도가 약하거나 비계사이의 미설치, 안전모 턱끈을 매지않는 등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재해예방에는 미흡하다는 판단하에 지속적인 계도와 사고발생시 철저한 조사 및 엄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이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실제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나 하는 쪽으로 눈을 돌리도록 유도

## ■ 근로자의 안전수칙준수 풍토 정착

- 재해예방의 또하나의 축인 근로자의 안전의식 정착을 위하여 안전수칙 위반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를 경고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의 검토 및 확실한 집행, 안전수칙 강조의 달 행사등 캠페인의 실시,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에 대한 일제점검의 실시등 근로자의 안전수칙준수 풍토를 확실히 정착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

※ 근로자들이 실적을 우려하여 안전관계자의 지시에 순응하는 등 지금의 상황은 이를 지혜롭게 이용할 시 안전수칙준수 풍토정착의 호기로 작용할 수 있음

- 또한 이동안전교육센터 교육등 각종 교육시 근로자의 개인보호구 착용등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집중교육을 실시

## ■ 자율안전관리제도 확산

- 재해율이 우수한 업체는 지도점검의 면제를 확대하고,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및 심사를 면제해 주는 자율안전관리업체제도의 확대등을 실시하여 안전관리 능력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한 간섭을 배제하므로써
- 위험요인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당해 현장의 소장등 안전관리자들이 점검시 지적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재해예방조치를 하도록 유도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 ■ 기술적인 지원의 확대

- 각종 작업의 안전관리절차서, 거꾸집동바리 설치 매뉴얼, 안전이 고려된 신기술의 자료 수집·개발등을 추진하여 각 업체에 보급·사용토록 조치하고
- 기술력이 모자라는 영세규모현장등에서 지원요청이 있을 때에는 산업안전공단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여 명실상부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재해예방활동을 강화
- ※ 『거꾸집동바리 붕괴대책』의 일환으로 산업안전공단에서 동바리작업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층고가 높은 동바리설계등에 대한 기술요청이 있을시에는 무료로 지원하고 있음

## VI. 맺 음 말

-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를 단순히 비용으로만 생각하는 잘못된 관념에서 초래될 수 있는 안전투자소홀, 안전관리조직의 통폐합, 안전관리 인원의 감축등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 어려운 경영난속에서 분투하고 있는 건설업계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 자율적인 안전관리의 확대,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등을 통하여 재해예방활동을 내실있게 수행하는 것이 유례없는 경영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업체를 살리는 수단이 될 것임